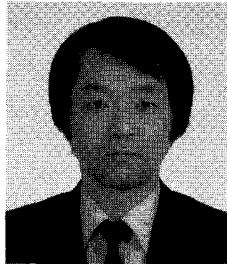


무증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예방보건사업의 몫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질병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경제의 발전에 따른 영양, 주거, 위생상태의 개선과 더불어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50년대의 폐렴, 기관지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시대에서 90년대에는 각종 암, 뇌혈관질환, 순환기질환, 만성간질환, 당뇨병 등이 주요 사망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선진국에서 이미 1950년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란 개념으로 확립되어 질병예방, 건강보호, 건강증진 등의 3대 영역에 대한 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양상의 변화와 학문적 발달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보건정책의 기틀을 확립하는 한편 생산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김 문 식
보건복지부 보건국장

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기반확충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국민 건강의 기본 시책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고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인 금연과 절주에 대한 규제조항 집행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 즉, 흡연·과음 경고 문구를 담배와 술에 표기하였으며 금연·흡연 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행정의 집행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이 부진하여 건강증진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으로 평가된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들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7년부터는 2000년까지 분야별 건강 증진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등에 건강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이 기금으로 보건교육·홍보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건강증진시범 보건소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 체계의 정착과 함께 건강증진실천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생의 조기금연교육 및 공공건물의 금연구역화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와 더불어 절주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를 통한 영양개선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영양사에 대한 직무교육의 강화 및 지역영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병 및 암·성인병 관리 사업강화

정부는 이미 앞서와 같이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실천 운동을 시·군·구의 주요 업무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결핵, 나병, 성병, 예방 접종 등 전염병 위주의 관리체계를 성인병 등 비전염성 질병관리를 포함하는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였고,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단

기 계획의 작성,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질병관리과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1995년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정신보건법을 제정·발표하여 국민정신건강의 기반을 마련한 후, 지난 1년간의 부족한 병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 충청 정신병원 등 국·공립 정신 병원을 확충하였고, 정신질환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념하였으며 시행령, 시행규칙도 제정하였다. 97년에는 중앙과 지방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환자의 퇴원, 처우개선심사 및 정신보건정책자문기능을 수행토록하며 각 정신보건시설들로 하여금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구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이전을 추진하고 광주공립정신병원 건립을 지원하며 정신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년 10개소 씩 정신 요양시설을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며 지역정신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성인병 관리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국립 암센터 건립으로 1991년부터 98년까지 약 1000억을 투자

**정부는 질병관리체계를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책자 발간, 무료강좌 및 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당뇨병·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VTR을 보건소 등에 배부하고 있다.**

하여 500명상의 병원과 암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암연구 및 연구 지원, 암정보 및 홍보교육, 암예방과 조기진단, 암관리 조직 및 예산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암퇴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에도 이와같은 암연구 및 등록사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백혈병 환자를 위한 골수기증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1만명씩 10년간 약 10만명의 골수 기증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질병관리체계를 소극적 사후관리 체계에서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책자 발간, 무료강좌 및 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당뇨병·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VTR을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 배부하고 있다. 그간 실시해 온 성인병 검진사업은 97년부터 검진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보험의 피보험자 및 직장·공교의 피부양자의 검진 수준을 직장보험의 피보험자 건강진단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관리 수첩으로 발급함으로써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96년부터 만성질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려고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연간 수진일수를 폐지한 바 있었으나 97년부터는 65세

미만에서도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현행 수진일수 240일을 27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과학기술의 진흥

의과학,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2000년대를 주도할 산업으로 간주되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중점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보건의료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과학기술 평가단을 설립하여 연구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201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난치병 치료, 신약개발, 인공장기, 재활장비 등 분야별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96년에는 항암유전자를 활용한 암치료기술개발, 신약의 임상실험 등에 262억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MRI 국산화·인공혈관 개발 등의 G7 과제에 86억을 지원하였다.

97년에는 보건의료기술예산을 410억으로 증액하여 의과학, 의약품, 식품과학, 의료기기, 의료정보의 5대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DARK